

「미래 보건복지 정책 연구」 제9차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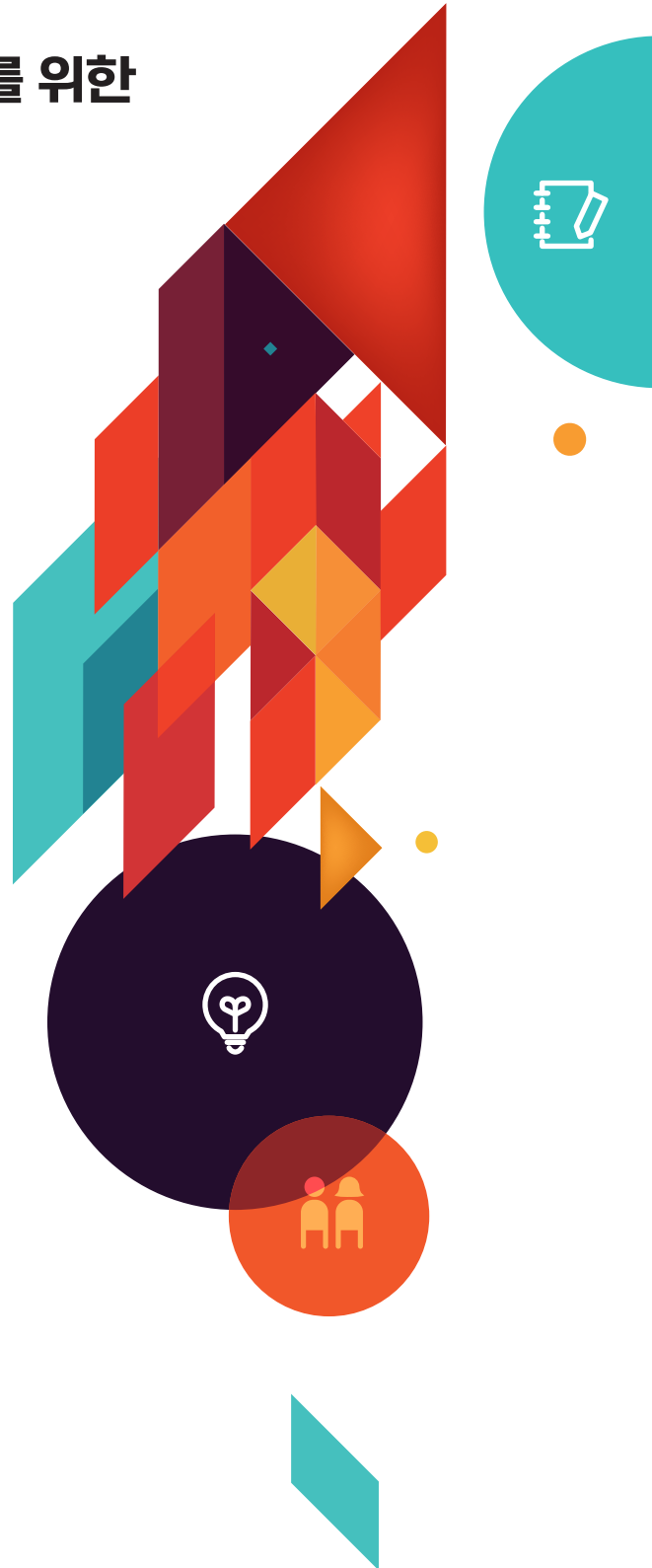
사회서비스의 보편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일시: **2021. 8. 31.** (화) 11:30~14:30

장소: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목 차 》

I. 「미래 보건복지 정책 연구」 제9차 포럼 개요	1
II. 「미래 보건복지 정책 연구」 포럼 주요 의제	2
III. 주제 발표	4

[발 표] 신사회정책으로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과제
(이재원 교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자유토론]

보건복지부 2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인

I. 「미래 보건복지 정책 연구」 제9차 포럼 개요

□ 추진배경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전문 연구기관 및 관련 부처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미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응력 강화 필요
 - 소득보장, 돌봄, 보건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미래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의 보건복지 분야의 대안 정책을 마련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場 마련 필요

□ 「미래 보건복지 정책 연구」 제9차 포럼 개최(안)

- (일시·장소) 2021.08.31(화) 11:30~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세종시)
- (주제 안) 사회서비스의 보편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발표) 신사회정책으로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과제
(이재원 교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 [자유토론]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2인 예정(미정)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1:30~11: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11:35~11:40	5'	▸ 개회사 및 인사말씀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11:40~12:30	50'	▸ 발표 - 이재원 교수(부경대학교 행정학과)	
12:30~13:00	30'	▸ 자유토론 - 보건복지부 2인 미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인 미정	
13:00~		▸ 향후 일정 논의 및 폐회	

II. 「미래 보건복지 정책 연구」 포럼 주요 의제

○ 주요 의제 영역

분과	분과별 주요 의제영역(안)
총괄 분과 (사회정책 환경변화)	1차 :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과 현황, 대응 방향
	2차 : 한국이 나아가야할 복지국가의 미래상
	2차 : 보편복지/선별복지 논쟁과 정책적 합의
	3차 :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와 現 사회안전망의 문제점
	4차: 사회보장 측면에서 조세정책의 방향
소득 안전망 분과	노인 빈곤 문제 해소 방안
	5차: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쟁과 합의
	아동 대상 소득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
	청장년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돌봄 안전망 분과	취약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추진 방향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돌봄 경제 육성 방안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돌봄 정책 추진 방향
의료·건강안전망 분과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체계 개선 방향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 과제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 내실화 방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 자원 체계 관리 방향성
바이오헬스 분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미래지향적 바이오헬스 R&D 지원 방향
사회보장 혁신 분과	고령화 시대 국민연금제도 발전 방향성 모색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디지털 기술 활용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서비스 확충 방안

○ 포럼 주제별 토의안건(추진 계획안)

분과	포럼 주제 (강연자)	일시
사회정책 환경 분야	[1차포럼]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과 현황, 대응 방향 (김윤태 고려대 교수)	4.01(목)
	[2차 포럼] 한국이 나아가야할 복지국가의 미래상 (윤홍식 인하대 교수)	4.21(수)
	[3차 포럼]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와 現 사회안전망의 문제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5.12(수)
	[4차 포럼] 사회보장 측면에서 조세정책의 방향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02(수)
소득분야 I	[5차 포럼]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쟁과 합의 (강남훈 한신대 교수)	6.15(화)
돌봄분야 I	[6차 포럼] 신기술 활용 돌봄 혁신 방안 (배시화 가천대 초빙교수)	6.29(화)
청년정책	[7차 포럼] 청년문제 진단 및 주요 정책 방안 (강보배 민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7.20(화)
인구정책	[8차 포럼] 인구문제 진단 및 이슈, 해결책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8.03(화)
복지서비스	[9차 포럼] 사회서비스의 보편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8.31(화)
기타 (플랫폼 경제)	[10차 포럼] 플랫폼 경제란 무엇인가? (이승훈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9.07(화)
기자가 보는 보건복지	언론에서 바라보는 보건복지 정책 전망(미정)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1인 예정)	미정
최종 총괄	미래 보건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가칭) (복수 강의자 섭외 필요)	10월 1~2주

발 표

신사회정책으로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과제

이 재 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사회정책으로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과제

2021. 08. 31

이 재 원 (부경대)

大正

Contents

- I. 현실에 대한 인식 : 안되고 못하고 없다
 1. 신사회위험과 정책체계 불일치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
 3. 자치분권의 전제조건변화
- II.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
 1. 4차혁명시대의 사회정책 선택
 2. 신사회정책의 이론과 거버넌스
 3.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략 영역
 4.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
- III. 차세대 정책의 운영체계
 1. 업무 : 정부간 복지대타협
 2. 조직 : 사회서비스 조직과 기능

- ❖ 사회문제는 복잡 다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서구 교과서에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 ❖ 수도권은 과잉이고 지역은 과소상태, 표준적인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이 적합한 **지방은 없다**.
- ❖ 현금급여(수당) 중심으로 사회재정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 **지출 재원이 없고** 지방은 우선순위가 없다.
- ❖ 글로벌 경쟁시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시대, 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미래 재원은 없다**.
- ❖ 복잡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업무는 분주하고** 개별 사업은 모두 성공적인데, 정착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 ❖ 모건복지부가 개발/정착시킨 지역사회서비스들은 대부분 **지방이양 대상**이다. 안정적인 복지부의 **시영은 없다**.



I. 현실에 대한 인식 1

“과거의 정책/제도에 미래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 신사회위협이 유형의 다양성과 규모 방대성 지속 : 인식은 공유하지만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은 소극적
- 소극행정 보다 나은 현행 정책플랫폼이 문제해결 발목 잡기 : **과거의 이론/정책에서는 답이 없다**

1 신사회위협 : 새로운 문제, 해결방안 부재, 문제 더 악화

❖ 근대산업사회, 선례/답 없는 새로운 문제들

- 저출산-고령화 : 출산장려와 노인복지로 대응 불가능
- 가족해체와 돌봄위기 : 국가의 완전한 돌봄대체 불가능
- 청년과 신중년 위기 : 근대 사회정책의 예외 (이론/답없음)

❖ 현금 급여 중심의 신사회정책 대응 : 임의적/분절적

- 문제-수당 연계사례 :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
- 현금 있어도 문제는 지속 → 완비되지 못한 국가/시장
[돈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돈 보다는 해결책이 필요?]

❖ 현재 처방/대응으로 문제 상황 더 악화 우려 : 정책역주행

- 청년NEET : 일자리/교육 회피자에게 일/교육 강요 → 은둔지속
- 교육/HRD : 다양성 필요한 상황에 정규교육 강화(SKY개슬화)
- 일자리 : 재정사업 일자리 → 자생력 약화, 의존성 심화
- 사회적 돌봄 : 가족/공동체 해체, 약탈적 시장경쟁 부작용
[민고 받기는 아이돌봄 vs 내 아이 내가 키우는 사회제]

2 현행 사회정책의 한계 : 자원, 역량, 운영체제

❖ 사회정책에 대한 잔여적 인식과 낮은 자원우선순위

- 보편 보다 선별 우선 고려하는 정책 : 취약성의 정치경제
- 가장 많은 자원을 지출하면서도 국정/정책 비중 낮은 위치
- 정부간 복지 책임 전가와 재정갈등 : 서로가 회피하는 주제?
[정치, 언론 등에서도 온정주의 선별복지 기조 지속 → 존재감 부재]

❖ 구조변화 시기에 단기적/임의적 정책처방 [기득권카르텔]

- 토큰리즘(tokenism) : 사업 종류 많지만 대부분 소비적/상징적
- 이중성 :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성과책임 [참여자 수, 만족도?]
- 정보격차와 도덕적 해이 : 현장에 대한 지식과 관리역량
- 이론/정책의 폐쇄성 : [공공성] 담론의 뒷 [...계, ...계, ...계]

❖ 분절적인 정책담당 조직체계 : 중복, 비효율, 비효과 [이중성]

- 사회정책 부문의 분절/분산 : 복지부-여가부-교육부
- 정책경쟁과 유사중복 : 복지부-고용노동부 [신중년...]
- 상호 협력 보다 [배제] → 문제는 없고 갈등과 영역만 있다?

현재의 제도 프레임을 강화하면 현재의 문제들은 더 악화 : 저출산 고령화, 근로빈곤, 가족해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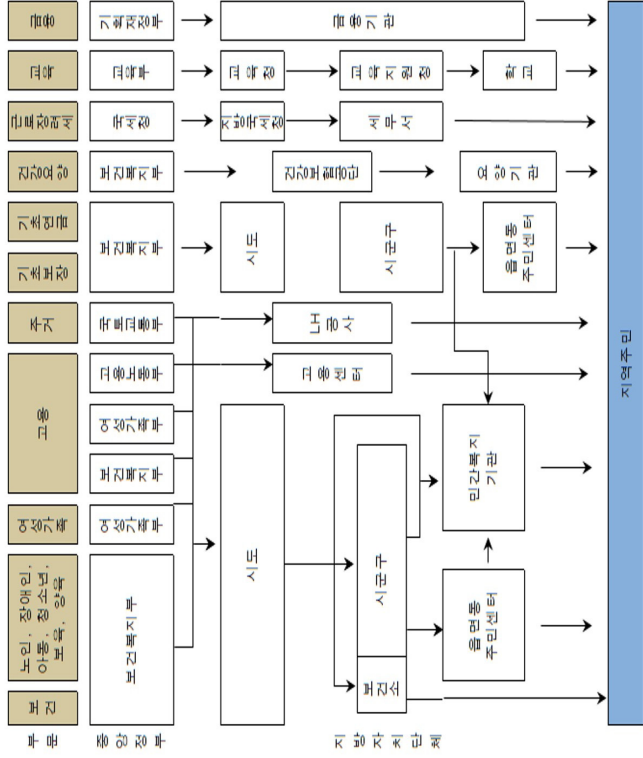


I. 현실에 대한 인식 2

“넓은 제도, 복잡하고 가는 전기줄에 과부하 상태 - 화재 위험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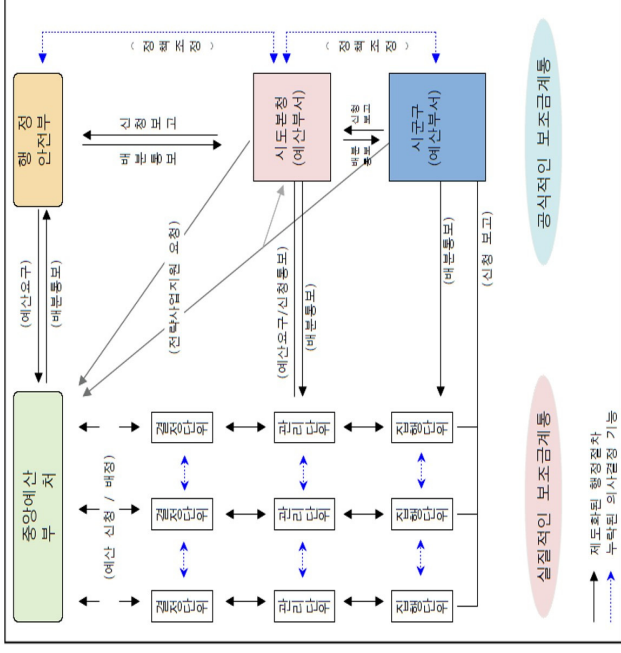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 : 기초지자체 기반, 시작의 출발점은 가능하지만 성장과 발전의 제약조건
- 중앙-광역-기초, 중층적 국고보조체제 : 전달체계 혁신의 제약 구조 [정보격차와 도덕적 해이]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 : 중간관리 비용 과다



주민은 없고 행정문서만 있다, 성과목표는 행정관리에 초점

2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체계 : 중층



성과는 없고 [회계장부]만 있다, 소통부재, 재정사업 본질/파편

모든 것이 모든 주체가 복잡하게 엮여진 상태. 효율과 책임의 상실 → 정책에서 문제 자체가 없다



I. 현실에 대한 인식 3

“사회서비스 운영체제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앙-지방] 자치분권 구조”

- 사회서비스 집행체계의 구조적 변화, 자치분권 / 지역사회 / 지역균형 : 자치권, 관할구역, 주민
- 21세기의 자치기반에서 20세기 근대산업사회 정부간 재정관계의 유효성은 지속 감소 : **소멸시효 경과**

1 자치권 : 협력체계 해체 ❖ 수직관계[지휘감독]에서 수평관계[협의계약]로 전이 : 중앙정부-지방정부 • [중앙정부는 국민이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이 구성한다.] ❖ 정치권력체계에서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로 전이 • [현재] 민주주의 접근 : 중앙정부 독점 권력의 공간분산[분점] • [미래] 주민생활 접근 : 지방정부는 주민 일상생활 보장하는 서비스 공급기구 → 지역사회공동체, 사회경제 영역 • [권력정치는 중앙에 한정]	2 행정관할구역 : 전달체계 누락 ❖ 의사결정과 통치구역에서 공공서비스 공급구역으로 전이 ❖ 광역공공서비스 공급구역단위 다양화 • 특정 광역서비스 공급하는 지방정부 연합[조합] 전문기구 활성화 • 예, 광역교통정, 광역수도정, 광역환경정, 광역시설관리정 등 ❖ 인구소멸지역, 자치반납지역 등의 빈 공간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관할	3 주민 : 생활인구와 정책사각지대 ❖ 주민 요건과 구성의 다양성 • 주어진 주민 → 스스로 선택하는 주민 • 항구적 주민 → 일시적 주민 • 야간정주 주민 + 주간활동 주민 ❖ 주민공유 (국민은 모든 지역의 주민) • 주민의 복수행정구역 선택 • 예. 복수주소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기반 주민유치 경쟁의 전제조건] • 주민이 복수주소를 소유하면 지방 선택의 재량과 자율 대폭 보장 가능 ❖ 주민중심 자치분권 (중앙규정 주민 거부) • 관할구역간 주민의 공공서비스 선택권 보장 필요 → 지방정부간 사회서비스 경쟁체제, 관할구역 특점의 해체
자치분권 강화 경우, 지자체를 일선행정기관으로 활용하는 현행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지속 가능성 계속 악화? (정보격자-도덕적 해이)		
기초 관할구역내 주민 수 기준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규모경제 확보 불가함. [생활인구]를 제도화하여 단거주, 이동수요 포함 필요		

보건복지부의 표준화된 사회서비스 전달체제는 새로운 자치분권 조건 변화와 불일치 : 비효과적

II.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

Contents

I. 현실에 대한 인식 : 문제의 출발	II.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	III. 차세대 정책의 운영체계
1. 신사회위험과 정책체계 불일치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 3. 자치분권의 전제조건변화	1. 4차혁명시대의 사회정책 선택 2. 신사회정책의 이론과 거버넌스 3.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략 영역 4.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	1. 업무 : 정부간 복지대타협 2. 조직 : 사회서비스 조직과 기능

신사회정책의 범위와 방식 다양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경로의존적 고정관념 혹은 접근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재난지원금 사례와 같이 사회서비스 보편성을 강조해도 실제 정책은 여전히 취약성 기준의 [선별적] 사회정책의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의 사회정책거버넌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과 정책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금급여(수당)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출확대될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공급하나?

증세와 공공성 조건에 묶이지 않는 사회서비스의 독립적인 정책 플랫폼 : 시장과 산업

- 5 -

II. 차세대 정책영역 1

4차산업혁명시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사회정책 선택은?

- 사회운동/사회정책은 [노동] 중심 → 신사회운동/신사회정책은 [복지], [환경], [안전]... → **생활중심?**
- 디지털, 인공지능, 자동화의 4차혁명시대, 상대적 노동생산성의 한계 → **임금수준의 경제학적 근거는?**

1 자본주의체제, 상대적 생산성과 생산요소 가격결정

❖ **비용극소화 / 이윤극대화에서 노동의 가격 결정**

$$MRTS_{L,K} = \frac{MP_L}{MP_K} = \frac{w}{\frac{w}{v}}$$

에서

$$w = \frac{MP_L}{MP_K} \cdot v \quad \text{혹은} \quad w = MP_L \cdot \frac{v}{MP_K}$$

❖ **전통적 접근방식 : 수정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 단체교섭권 [노사협상, 조합주의]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제도 → 생산성과 분리된 기본 보장선 설정
- 사회적 임금 → 공공영역 확대 → [비용의 공공화]
[보물 비용질병(에 호봉제), 정부지원 + 정부실패]

노동이 자본과 경쟁 불가시대 + 정부실패의 일상화 시대

2 생활임금 보장 위한 국가사회정책의 유형

❖ **보편적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 : 사회서비스**

- 공동체/가족해체시대 → 사회실패 → 생활보장(서비스)
- 생활영역의 공공개입 한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한계

❖ **사회적 경제체제에서 노동과 임금 조건**

- 사회적 가치 기반에서 시장경제 참여
- 생산성의 지속가능성 한계, 사회영역의 경제전환[비판]

❖ **정의로운 소비자 : 도덕적 소비자 운동**

- 노동생산성에 사회적 가치 부여 → [공정]
- 소비자의 도덕에 호소하는 비시장적 접근. 보편/지속성?

❖ **기본소득제도 + 사회적 임금 : 경제와 사회의 이원화**

- 이원급여 = 노동급여 [기업] + 국민급여 [국가]
- 경제성장과 조세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전제조건

사회정책은 역사적으로 단계진행/누적 → 지금의 선택은?

보건+환경+노동+환경 = **보건사회부**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 차세대 복지부는? - 6 -



II. 차세대 정책영역 2

신사회정책 위한 이론과 거버넌스 정립 : 새로운 문제-새로운 이론

- **현행 사회정책** : 근대산업사회 복지국가이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이론 **[선별성, 취약성, 예외성]**
- **사회서비스를 공공부조 플랫폼에서 공급하면 기펜효과** 발생하여 소비 감소 위험 : 공공성 담론의 부작용 **[예시, 보건소 백신접종과 병의원 백신접종에 대한 시장의 인식/소비 행태]**

1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와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이론

	전통적 복지정책 (근대복지국가)	사회기반투자 정책 (사회투자국가)
위기	전통적 사회위기 (빈곤과 질병)	새로운 사회위기 (양극화, 근로빈곤, 저출산·고령화)
대응	소득보장, 의료보호	인적자산 및 사회기반 투자
대상	빈곤선과 기초생보자 (3%, 150만명)	일반시민 전체 (평균 이하 60%, 3,000만명)
우선 순위	경제개발 (물리적 기반투자)	사회개발 (사회적 기반투자)
거버넌스	집권, 표준, 정부 공급자 중심	분권, 다양, 시장 소비자 중심, 납세자 책임
기본성	잔여적 복지 (시혜와 권리)	보편적 사회서비스 (욕구와 보완)
	배제, 분리, 수유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선)	통합, 계층유동성, 취적투자 (사회보장기본법과 생활보장)

기존 이론 응용의 한계, 정책 목표와 특성 따른 이론체계 정립

2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거버넌스 정립

	목적	기초이론	복지정책	조직구조	재정관리	운영원칙
I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국가 포드주의 (경제학)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기관 전국조직	기금 사회보장세	적립·부과 의무화가입
II	국민기초 생활보장	상대적빈곤 사회안전망 (사회복지학)	기초보장 참여적복지	기초단체 위임사무	일반회계 국고보조	국가표준 선별주의 우선순위
III	사회기반 일상생활	사회개발 사회투자 (학제적)	보편적 사회서비스	성과계약 협력적 거버넌스	특별회계 표관보조	지방다양성 보편주의 소비자중심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2013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 [사회실패]영역, 총괄 부처와 정책방식은?

근대산업사회
사회정책/복지국가론
[공공성]

정책체계와 재원 그리고 성과책임 특성의 신규 정립

21세기 사람중심 사회, SOC의 재해석 → 사회기반이 국가기반 → 주류사회정책과 거버넌스



II. 차세대 정책영역 3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략영역 [보건복지부] : 개방과 협력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을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설정 필요 : 추상적 개념 논쟁의 뒷에 주의
- 보건/복지 영역의 돌봄은 기존 정책영역,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필요** : 협력, 개방, 역량, 참여가 전제조건

1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유형(개념) : 7 X 7

분야 수단	분야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상당		복지부 고유영역 (공공성)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사회서비스정책 확산 가능
영역, 왜 확산 못하나?

타 부처 협력 영역
[공공과 시장]

❖ 2013년 전부개정, 여전히 개념 논쟁

❖ 7X7=49개 영역중 복지부는 6개에 한정? 나머지는? 사

회서비스정책은 고유영역 이외로 확장 필요

❖ 보건복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영역과 신규

사업의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공공성]

가지 논쟁 속에서 과거 회귀 혹은 정체 상태

2 [사회서비스] 정의에 대한 다양한 규정

법률	개념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의 제공·관련 시설의 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서비스"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별·보전 및 관련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년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련법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	" 사회복지서비스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 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행정/정책에서는 전략(사업) 영역 설정이후, 해당 영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의] 조항에서 규정 → 개념 보다는 일 먼저

돌봄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분리 필요 / 기획은 스스로 재원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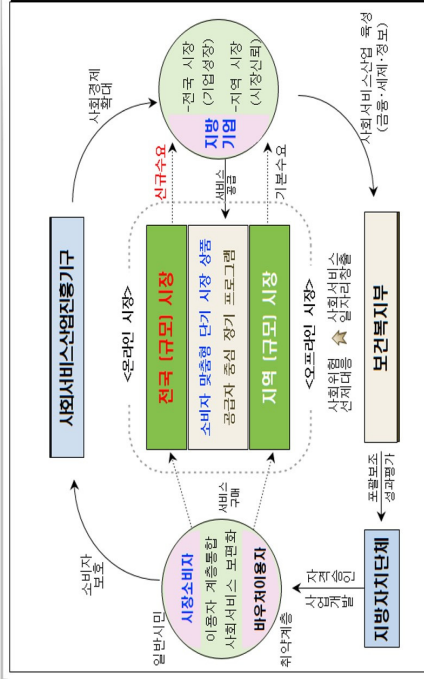


II. 차세대 정책영역 4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 : 기업-시장-산업 [실천가치로서 공공성의 유효성]

- 이용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는 시장기반에서 활성화 가능, 정부의 공적 역할에는 [혁신]의 한계
- 국고보조방식의 사회서비스는 관할구역 독점 구조 극복 곤란 → 지리적 경계를 넘는 시장기구 활성화

1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 지역시장과 전국 시장 통합



❖ 사회서비스 행정구역 특점의 사중손실 : 지속가능성 취약

- 사회서비스 시장규모 : 기업의 잠재 사업영역 확보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상품)에서 지속적 혁신과 개선
- 사회서비스 이용자 다양성과 프로그램 혁신의 결합 조건

❖ 지방행정구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 지방이양 대상

-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 분담과 전담
-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격차와 도덕적 해이 쟁점

2 사회서비스 공정경쟁관리와 산업 육성

❖ 사회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관리

- 등특제와 허가제의 유연한 운영
- 사회서비스 경쟁관리의 제도와 : 준시장 경쟁 활성화
- ❖ **사회서비스 산업육성법 제정과 이용자 공신력 지원**
 - 기업지원의 간접지원 수단 확충 : 소특공제, 기업ESG 연계, 사회서비스 상품홍보 (프로그램 자체의 품질 인증)
 - 사회서비스 산업협회 설립과 박람회 운영 : 산업협회/박람회/학회/연구기관 등 정책인프라확충

❖ 사회서비스 혁신체제 구축 및 활성화

- 사회서비스 R&D 및 운영제도 : 문제해결형으로 접근, 독립 전 문화된 R&D 사업 운영체제 (고부가가치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방법 혁신 : 4차혁명과 사회서비스의 결합, 소셜 리빙랩과 사회서비스 결합
- 지역사회 혁신 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정책 거버넌스 결합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 사회서비스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교육훈련, 자격증, 벤처센터, 창업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이 공급 = 이용자 중심의 시장기구 = 사회서비스 산업

Ⅲ.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의 운영체계

Contents

I. 현실에 대한 인식 : 문제의 출발	II.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	III. 차세대 정책의 운영체계
1. 신사회위험과 정책체계 불일치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 3. 자치분권의 전제조건변화	1. 4차혁명시대의 사회정책 선택 2. 신사회정책의 이론과 거버넌스 3.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략 영역 4.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	1. 업무 : 정부간 복지대타협 2. 조직 : 사회서비스 조직과 기능

국가정책에서는 국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망라적으로 포괄하지 않는다. 정책이 개입해야 할 필수 영역[부문]에 한정하여 문제해결의 국민신뢰 확보할 수 있을 사업내용/방식/조직/기능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책체계가 정착된 영역 이외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을 확보하고, 실천력 갖춘 조직/인력/기능을 설계해야 한다.

감당 가능성... 전략 영역 설정 없을 경우, 과잉계획 혹은 과소계획이거나... 스스로 냉소적일 위험... - 10 -

III. 차세대 운영체계 1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

- **분권국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수평관계에서 기존의 수직적 정부간 관계에 대한 **분권형** 개편 필요
- **사회서비스정책** 영역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부담 경감**, 정책구조의 **단순화**와 **전문화**를 위한 조건



III. 차세대 운영체계 2

사회서비스 정책의 담당 조직 : 지원기능 보다는 혁신 선도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조직체계의 개편 전제 : 대상별 조직 vs 기능별 조직, 조직과 인력의 역량개발
- 공동체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기반의 사회보험 재원 :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 사회서비스보험 ?

1 사회서비스 담당 조직 : 부문 vs 기능

❖ 현재 : 부문별 조직구성 [사회서비스 중복/분절]

	노인	장애인	아동	...
소득				
건강				
생활				
사업	제공기관 제공인력 자격관리 지불장산 ...	제공기관 제공인력 자격관리 지불장산 ...	제공기관 제공인력 자격관리 지불장산 ...	
(비고)	노인정책 부서	장애인 정책부서	아동정책 부서	...

❖ 사회서비스 담당부서의 위상과 역할 애매?

- 독립적인 정책[사업] 영역 vs 각 부서의 지원 업무 [?]
-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영역에 한정되는 사회서비스기능
- 사회서비스 사업의 성과지표/성과책임 중복

❖ 대상별 개별 정책거버넌스 고착 상태 (통합연계 애로)

- 원칙은 통합이지만 현실은 갈등 → 역사성 인정 필요

2

사회서비스 담당 조직개편 제안 [혁신 선도]

부서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서비스 기반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업무	정책관리총괄	전자정부시스템	시장경쟁 관리
	포괄보조운영	이용자 보호/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범부처협력	데이터관리/헬싱	사회서비스R&D
	정부간 관계	기업과 종사자관리	사회서비스 박람회
	국제협력	사회서비스HRD	사회서비스 협회
	...	...	...

- ❖ 기반투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기능에 초점 :
업무 영역/전략목표의 단순화-전문화 필요 (예, 시장, 이용자, 기업, 기술개발 등 한 개 분야에 한 개 시책 집중)
- ❖ 보건복지부 고유 정책 영역 보다는 외부 협력 영역 중심으로 역할 확대 (대학과 산학협력, 문화와 서비스 결합...)

사회서비스가 복지부의 주류정책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한 조건 : 조직과 기능



관리규정서문



자유토론

